

## 민의 살피 삶에 힘이 되는 정책 펼쳐야



백석민 의장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에 이어 긴 장마와 폭염, 잇따른 풍수해로 힘든 여름을 겪고 계신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과 선배 동

###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사

료의원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선제 대응하는 예방접종 사업과 경제 활성화,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해 약 2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

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반시설이나 피해보상 기준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 땀집 처방보다 장기적 관점의 방재정책 마련에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독감백신 수급과 오륙도 폐이 활성화 등 주민 삶에 직결된 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구정에 많은 재정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단기 지원대책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

체제 변화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문제를 숙고해서 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최측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중요 예산·법안·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엄중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더욱 세심하게 민의를 살피고,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여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백석민)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28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벌였다. 의회는 개회 첫 날인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 안전심사를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구술)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준)는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시켰다. 이날 경제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

결, 1건은 수정가결시켰다. 9월 14일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명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1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날 강건우, 김철현, 박미순, 박구술, 고선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아름다운남구21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결청취의 건(찬성의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결청취의 건(찬성의견)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오륙도행복꿈터’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는 모습. 왼쪽부터 강건우 부의장, 류영호 시설장, 백석민 의장, 고선화 의원, 박구술 운영위원장.

### 남구의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남구의회(의장 백석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관내 공동생활가정 ‘오륙도행복꿈터’와

‘밀알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시설의 현황과 운영상 어려운 점, 시설종사자의 고충을 청취



‘밀알공동생활가정’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는 모습. 왼쪽부터 박구술 운영위원장, 백석민 의장, 강건우 부의장, 남재중 시설장.

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시대인 점을 고려하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및 지역의회로 구성된 최소 인원으로 이루어졌다.

### 이강영 의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 이병준 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이강영 의원



이병준 의원

### ■ 의원 조례 발의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이 있었다.

이강영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

였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환에 부응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꾀했다.

이병준 의원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및 지원내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우수



### 비대면 의정협의회 월례회

백석민 남구의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화상회의에 참석(사진)하였다. 이번 회의는 8대 임원진 구성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16개 구군의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백석민 남구의회 의장은 지난 9월 24일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화상회의에 참석(사진)하였다. 이번 회의는 8대 임원진 구성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16개 구군의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구민의 미더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위 조례안들은 지난 9월 10일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어 9월 15일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5분 자유발언

### 장애인의 감염병 재난 불평등에 관하여



강건우 의원  
(용호2·3·4동)

지난 3월 제주시에서는 장애를 앓고 있던 18살 아들과 어머니가, 6월에는 광주시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사태 때는 혼자서 움직이기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자체가 준 구호물품을 조리가 필요한 생선과 생배추, 라면이었습니다.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없었던 겁니다.

부산시의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에게 지원한 신규사업과 장애인돌봄 관련 사업은 전체 예산 중 8억 6천만원, 단 2%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2% 예산이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증 장애인돌봄꾸러미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에 관한 방송 지원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기 휴관에 따른 제도권 복지의 공백상태입니다. 사스, 메르스 패처럼 반복되는 재난임에도

시스템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감염병은 장애인 지원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가 아닌 복지시설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우리나라는 휴관, 휴교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대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고 공급자(복지시설 등)가 예산 사용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결정내용 등을 준수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보조금 사용범위를 넓혀줘야 현장에 맞는 예산지원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예산은 신속히 변경해서 현장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의 생존·생명·생계에 관한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완전한 비대면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다 유연한 복지시스템 구현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애인 유형 15분류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는 시각·청각·뇌병변·농아 등 15가지 유형에 따른 매뉴얼과 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각각의 유형들이 복잡하여 일선 현장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국민의 생존·생명·생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라도 장애인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유형별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염병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남구라면 이번에도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 불공정은 없애고, 과정은 협치와 함께



박미순 의원  
(용호1동)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에 밤낮으로 애쓰신 남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전 남구청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외적인 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별정직 5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정책비서관의 사퇴로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를 잘 아는 전문성을 지닌 정책 전문가를 임명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또다시 구청장은 새로운 정책비서관에 복구 구의원을 지낸 친연인 인사를 9월 2일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새로 온 정책비서관은 복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한 복구 토박이로 제대 복귀자의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때 민주당 측 시의원 경선에 낙선한 뒤 오거돈 전시장주도 캠프에 합류하여 그 공로로 부산시 별정직 5급 비서로 근무하다가 오거돈 전시장 성추행 사건

으로 인해 다른 정부 라인과 같이 면직처리된 인사입니다. 오거돈 전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당연연직된 분을, 우리 남구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복구를 기반으로 활동한 정치인을 남구청 정책비서관으로 임명한 구청장의 행위는 남구민을 대하는 구청장의 오만을 잘 보여주는 불공정한 인사입니다. 남구의 정책을 수립하고 소통해야하는 정책비서관에 전문성이 결여된 친 연권 정치인을 임명한 것은 구민 중심의 구정운영을 무시한 남구청장의 정치적 인사관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참담한 인사일 뿐입니다.

의회는 이번 정책비서관 임명인 친 연권 인사들의 자리 나눠주기식 인사였는지, 구청장의 친정 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였는지 구민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바라며, 결과의 불공정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5분 자유발언 시에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차 말씀드리건대 남구의 주민은 선출직인 구청장과의 의회 의원도 아닙니다. 온전히 남구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측근 인사를 자행하는 행위, 의회와 협의 없는 정책의 일방적인 언론 보도 등 과연 지금의 집행부 정책방향과 과정은 올바른 것인지, 과연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 바라보며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우리가 지켜나가기에 할 일 중 하나인 것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초심의 약속을 잊지 않는 구정정이 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선화 의원  
(용호2·3·4동)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은 19세부터 61세까지 구민의 50%인 8만명 정도의 구민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예방접종 관련 조례 개정과 예방접종 비용 29억 원을 추경에 편성, 승인을 강요하여 통과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동시유행할 경우 의료대란이 예상되어 충분한 공감할 수 있는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의회와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거나 의결을 청정한 후 추진해야 하는 신규 사업이나 중요사업을 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와 예산도 확정되기도 전에 ‘주민 알권리’라는 포장을 입고 언론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의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력화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폭거이며,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바위가 두 개 달린 수레와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느 한 바퀴만 앞서 나가는 폭주를 일삼으면 목격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복되고 말 것이며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나아간다면 출발은 늦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과 의회의 소통과 공감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는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예상되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를 해야만 구민의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김철현 의원  
(용당, 갈만1·2, 우암동)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남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더욱 적극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피해아동의 부모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아동의 대부분은 본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보도는 단순한 언론의 과장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4,604건으로 2014년 10,027건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2016년 이후 매년 102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구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제도적인 조치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남구민의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보호시설을 확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위기가동 대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 대응, 보호·사후관리」라는 단계별 과제와 대책을 마련해야만 다양한 사례에 놓여있는 위기가동을 관리·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모인식개선 교육과 위기가동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남구가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 아동전문기관, 경찰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과 협력을 한다면 현실적인 대책이 도출될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학대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남구형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council.bsnam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 식자재마트와 지역상권보호



박구술 의원  
(대연1·4·6동)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함께 남구 소상공인들의 삶은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선 ‘with 코로나’의 태도로 시장의 태세에 발맞추고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열기는 예전 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7월27일 부산일보에서는 “장보고 마트”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 두 건이 나왔습니다. 장보고 식자재 마트

는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둔 식자재 마트로 연 매출 3,164억 규모의 ‘기업형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로 남구에 출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형 식자재 마트는 자영업자들에게 식자재를 파는 도매상이었으나 자본을 앞세운 운영방식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음에도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권을 초도화시키면서 장보고 식자재마트는 2015년 대구광역시 조례제정 후 출점에 제약을 받지 타지역으로 출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업형 식자재 마트는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 대상인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할 법적근거는 충분합니다. 공정경쟁의 불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이나 소형마트 등 상대적 약자의 상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힘의 차이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져 남구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남구가 선제적으로 ‘서민경제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구를 시작으로 부산시의 조례입법을 유도하여 부산시 주도의 소상공인 및 상권보호와 더불어 부산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이룰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정에 의거하여 남구 전체를 ‘서민경제보호지구’ 혹은 ‘골목상권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남구의 전통 시장 경제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형 식자재마트의 신규 출점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도당,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등 남구를 위한 사회환원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법적 출점 규제가 불가능한 경우 영업일정 조율이나 오륙도페이 가맹 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협력을 이끌어야 합니다. 자율경제시스템으로 규제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업의 발전과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배려와 양보 또한 우리의 소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